

여야, 본회의 개최 일정 합의 불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놓고 여야 대립 한국·바른미래 “18~19일 열어 추경·해임안 처리” 민주 “정쟁 위한 의사일정 동의 못 해, 전례 없는 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 회동을 열고 6월 임시국회 후반 본회의 개최 일정을 논의했지만 결국 결렬됐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본회의 개최 일정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24일 당시 합의문대로 18~19일 양일간 본회의 일정을 잡고 추경안 처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상정 및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의사일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본회의 일정을 이틀 잡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표결에 매우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안보 파탄에 대한 국민 불안

이 커서 이 부분에 대해 한번쯤 국회에서 책임을 묻는 게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길로 보는데 이것조차 원천 봉쇄하는 여당이 매우 안타깝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 국회 출구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라며 “표결을 위해서 이틀이 필요하다. 해임건의안 제출시(본회의) 최초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게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재안에도 민주당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정 안은 18일, 19일로 하고 마지막에 해임건의안을 올리려는 것으로 제안했다”라며 “여당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도 “이미 약속된 18일 본회의 날짜인데,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 동의하지 않는 집권여당은 도대체 제정신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추경 처리만을 위해 19일 하루만 잡아야 한다는 것은 야당을 집권여당 거수기 노릇을 하라는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 예결위 심의를 통해 19일 본회의를 잡아서 처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6월 임시국회의 남은 의사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반면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쟁을 위한 의사일정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달 24일 합의문도) 언제는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고 하다가 합의됐다고 한다. 이윤배반이다. 자기모순이고 자승자박”이라며 “국방안보까지 정쟁에 끌어들이는 추경 처리를 안 한다. 시급한 민생을 위한 일본의 수출 제재 조치를 비롯해 추경 처리를 안 한다고 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꼬아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추경을 볼모로 삼

아도 너무 많이 삼는다. 우리 착한 추경을 왜 그렇게 못살게 구는가”라며 “추경 처리 이틀씩 할 필요가 없다. 19일 하루면 된다. 다른 정쟁을 위해 양일간 의사일정에 합의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크리순 때문에 국정조사나 해임건의안을 하지 않았다. 국방안보 상 이유였다고 본다. 그게 나름대로 성숙한 태도였다고 본다”라며 “너무 의도가 명백해 보이는데 우리가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박지원 “대표적 지일과 이낙연, 물밑 접촉 나서야...국익 우선”

김대중 전 대통령 사례 들며 국익 우선하는 결단 촉구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15일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싸워야 할 것이 아니라 지일과 일본의 사회·문화 등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진 외국인들이 일본으로 가서 물밑 대화를 하는 방식 등으로 갈등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DJ였다면?’이란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과거 한일회담 당시 현역의원들이 회담을 반대하며 의원직을 사퇴했을 때 DJ는 회담을 찬성했고 일본 대중문화 개방도 문화예술계 등

국민 반대가 심했을 때 DJ는 개방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에서 백방으로 노력했기에 힘을 모아줘야 한다. 그러나 싸우려고만 한다”며 “지일과 모두가 나서야 한다. 그러나 당정청은 뚝만 사리고 있다. 제2의 JPK(김종필)가 되지 않겠다는 보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위해서도 나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복은 있지만 참모복은 없다”며 “청와대부터 보신처를 찾아 총선에만 나가려고 한다. DJ였다면 이런 참모들에 날벼락을 쳤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오전 진행한 라디오 방송에서는 지일파들의 일본과의 물밑 접촉 필요성을 앞세우며 이낙연 총

리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낙연 총리는 대표적 인 지일파다. 일본에 굉장한 인맥을 갖고 있다. 동아일보 특파원 국회의원 4선을 하면서 계속 일본과 관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그걸 잘 안다. 그래서 대정부질문에서 이 총리에게 ‘일본에 다녀오라. 갈 때 나도 데리고 가라. 내가 할 일이 있다’고 했다. 저와 일본 자민당 니카이 간사장과의 관계를 (이 총리가) 잘 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모든 것에 우선해서 일본 관계를 푸는 것이 지금 정치권에서 정부가 할 일이다. 예전에는 대기업들에 오지도 못하게 하더니 요즘에는 자꾸 일본 가라, 협력하라고 하는가. 이걸 안 된다. 기업계도 나서고 정치계도, 모든 분들이 풀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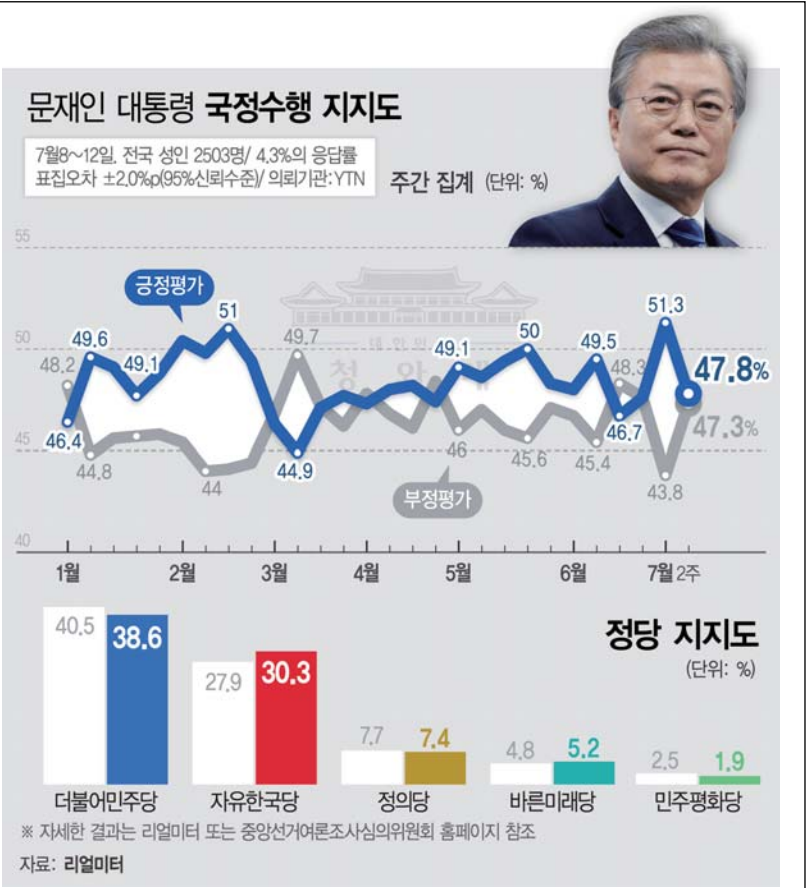
손학규 “추석까지 당 지지율 10%안되면 사퇴? 답변 보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5일 추석 때까지 당 지지율이 10%에 이르지 못하면 사퇴하겠다고 공언했던 데 대해 “답변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계파) 싸움이 혁신위까지 확대가 됐는데 우리가 지지율을 높이는 게 과연 현실적이지 가능성이 있는지 그 문제의 답변은 보류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주대한 전 혁신위원장과 만난 사실을 전하며 “사퇴 만류에 실패했다”라며 “세 분의 혁신위원이 사퇴했다. 당 혁신위원장을 세우는 걸 목표로 하고 있으나 과연 이 상황에서 혁신위원장을 누가 맡아주겠느냐”라고 했다.

이어 “혁신위가 계속 계파 싸움이고 당내 권력 투쟁의 연장이라면 이런 혁신위를 계속해야 할 것인지 솔직히 고민이 크다. 과연 위원장을 선임한다고 해도 제대로 혁신위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문대통령 지지율 하락 47.8%

일본 수출규제·최저임금 등 영향 미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최저임금 결정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의 의뢰로 실시한 7월 2주차(8~12일) 주간 집계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3.5%포인트 하락한 47.8%(매우 잘함 26.0%, 잘하는 편 21.8%)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5%포인트 오른 47.3%(매우 잘못함 33.3%, 잘못하는 편 14.0%)를 기록했다.공·부정평가의 격차는 0.5%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7월 1주차 주간 집계(1~5일)에서 6·30 판문점 회동 효과로 47.6%에서 51.3%까지 급등했다. 하지만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한 주 만에 지지율이 판문점 회동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간 지지율은 판문점회동 효과로 지난 3일 53.5%까지 상승했다가 일본의 수출 규제 이슈가 부상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지율은 4일 51.3%, 5일 49.6%, 8일 47.4%, 9일 45.7%로 나흘 연속 떨어졌다.

정부가 일본에 대한 전면 대응에 나선 뒤에는 하락세가 다소 진정됐다. 일간 지지율은 10일 48.5%로 반등한 뒤 11일에는 51.0%로 올랐다. 다만 최저임금 2.87% 인상 결정이

후 부정적 보도가 증가했던 12일에는 48.1%로 떨어졌다.

세부 계층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46.9%→36.4%, 부정평가 57.7%) ▲대전·세종·충청(47.7%→39.8%, 부정평가 53.8%) ▲서울(51.5%→48.5%, 부정평가 47.1%) ▲경기·인천(▼2.6%p, 55.1%→52.5%, 부정평가 42.8%) ▲30대(58.8%→53.2%, 부정평가 39.2%) ▲50대(50.5%→45.1%, 부정평가 51.5%) ▲60세 이상(40.9%→35.8%, 부정평가 58.8%) ▲40대(61.3%→60.0%, 부정평가 36.1%) ▲진보층(77.9%→74.5%, 부정평가 22.3%) ▲중도층(50.1%→48.0%, 부정평가 48.0%)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했다. 반면 광주·전라(66.0%→70.5%, 부정평가 26.9%)에서는 지지율이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리얼미터는 19세 이상 유권자 5만8899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2503명이 응답을 완료해 4.3%의 응답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